



◇인천영화학교 6학년생 8명이 1944년 여름 정신대로 나가기직전에 찍은사진.교장(왼쪽)은 사관(과담인신영영)도 정신대제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서 있다. [仁川=聯合]

「韓日협정」구해될 필요없어

「挺身隊배상」가능한가

일제의 의해 정신대로 구한민족회생(정신대)로 끌려간 한민족 여성들의 처참한 실상이 공개되면서 위대한 애국선 일본 국내법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떤지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야자와 일 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총회 본회의는 반한법을 제정한 후 65년 한일협정의 체결을 촉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구한민족회생(정신대)으로 끌려간 한민족 여성들의 처참한 실상이 공개되면서 위대한 애국선 일본 국내법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떤지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論議조차 안돼 원인무효

개인소송땀 무난 日底意

당사자 사망 기피 많아 정부가 나서야

해두나라 국가간의 청구권은 해결됐다지만 피 해자들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야자와 총리의 말대로 우선 피해자 개인들의 일

본정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국내법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

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사할린 등 본토나 원

폭피해자들의 피해구제할 리적이 먼저 구해받을 필

호사(차별)과 차별청구권은 없는 법을 전문가

들의 얘기이다. 소말시호는 피청구권자측에서 문제를 삼을때만 전제이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추이 소말시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크게 문제 될게 없다고池田총리는 지적했다.

나아가 일본정부가 정신대의모집과 운영에 개인한 사실을 시인한이상 일본정부는 구한민족회생(정신대)으로 끌려간 한민족 여성들의 처참한 실상이 공개되면서 위대한 애국선 일본 국내법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떤지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차원의 청구권이다. 국가간의 청구권은 해결됐다지만 피 해자들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의 배상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을 통해 이미 끝난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엔 이론적 약점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池田총리는 65년의 한일협정은 국민의 보호자인 국가가 대외적으로 이같은 보호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당시 협정은 1910년의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을 전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묵시적인 전제가 깔려있고 정신대 문제는 협정당시 거론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65년 협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옳다고 말했다. 일본국제법학자들도 「일본측이 정신대의 존재나 일본정부의 책임사실을 부인해왔다. 관련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자 이제와서 65년 협정을 들먹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법조계의 한관계자는 「정신대 문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한일협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65년 협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청구권을 행사해하고,이에따라 면밀한 법적 대응능력을 정부 스스로 개발해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瑛기기자>